

April 27, 2026

EU 한시적 위기 보조금 프레임워크: 논의 동향과 시사점

I. 배경 및 추진 동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집행위")는 2026년 4월 13일 중동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EU 역내 경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원조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State aid Temporary Crisis Framework)'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약 6주 만에 에너지 수입 비용이 약 220억 유로 급증하는 등 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됨에 따른 긴급 조치입니다.¹ 집행위는 4월 말까지 최종안 채택을 목표로 현재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집행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여 도입한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Framework, TCF)와 이를 대체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emporary Crisis and Transition Framework, TCTF)를 통해 이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친환경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예외적 보조금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에너지·원자재 가격과 운송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존 틀만으로는 충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에너지·원자재 가격에 특히 취약한 부문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고 한시적인 지원 체계를 새로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역내 핵심 산업 생태계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 역내 제조 및 물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II.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프레임워크 초안은 중동발 위기로부터 영향을 받은 산업과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의 보조금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민감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프레임워크는 농업, 어업, 도로 운송, 역내 단거리 해상운송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특히 2026년 2월 28일 대비 상승한 가격의 일부를 기업의 실제 소비량에 연동해 보전하는데,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그

¹ 유럽연합 기능조약 제107조는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하지만, 제3항에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합니다. 제107조 제3항 (c)는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허용하며, 집행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한 가격 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보조금 집행 절차 간소화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기업의 소비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공공 통계, 업종별 데이터 등)를 활용하여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심사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보다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다만, 역내 단거리 해상운송 부문은 연료비 비중, 운임 구조, 타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간소화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에너지 다소비 산업 지원 강화 및 탈탄소화 조건 완화

프레임워크는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비율의 상한을 기존 5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단기적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우선하여 탈탄소 투자와 연계된 기존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적용을 유연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전력 도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전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스화력 발전 연료비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도 사례별 심사를 통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III. 시사점

프레임워크 초안은 EU가 중동발 에너지-물류 위기에 대응해 국가 보조금 정책을 위기관리 도구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로 이해될 수 있는바, 우리 산업계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운송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상향된 보조금 수준과 완화된 조건을 단기적인 비용 경감 수단이자 중장기 구조조정의 완충장치로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역내에 생산거점 또는 물류 허브를 보유한 기업은 전력요금과 연료비 보조를 통해 단기적인 비용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지원 조건에 포함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전환, 공정 전환 투자 계획을 중장기 사업전략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회원국 별로 도입되는 세부적인 보조금 지원 요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실제 수혜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프레임워크는 EU 차원의 보조금이 아니라, 회원국의 재정 여력과 정책 의지에 따라 집행되는 구조라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인된 것처럼, 독일 등 재정 여력이 큰 회원국은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기업을 지원한 반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회원국은 동등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EU 단일시장 내에서 기업 간 경쟁조건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진출 대상 국가의 재정 여력, 정책 우선순위, 집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회원국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원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도 있습니다.

셋째, 예외적인 보조금의 반복과 확대는 EU 내부의 단일시장 경쟁 조건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역외 국가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적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특정 업종과 기업에 집중적으로 제공될 경우(특정성), WTO 보조금협정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수입국에서의 무역구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친환경 기준 등 다른 규제와 결합되어 사실상 비관세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프레임워크가 향후 보조금 규범 등 통상규범, 환경정책, 산업정책 등에 미칠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활동이 EU의 지원제도와 연계될 수 있는 여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의 EU 당국과 정책 대화 및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이 역내에서 차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구성원

김지이나

변호사

T 02.3404.0698

E jeena.kim@bkl.co.kr

한창완

변호사

T 02.3404.1076

E changwan.han@bkl.co.kr

권소담

변호사

T 02.3404.7651

E sodam.kweon@bkl.co.kr

본 Legal Update는 강나연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